

“전북TP 쇄신책 마련해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김철수 도의원, “연봉 역전현상 해결하는 사후처리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 보여주지 못한 채 담당자들 부당한 업무처리가 특감서 사실로 드러나”



전북의 산업과 기술 혁신거점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TP)의 미숙하고 안이한 경영관리가 도마 위에 올라 기관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경제위원(정읍,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전북TP가 미숙하고 무능한 기관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혁신거점기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기관 쇄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TP는 기존 직원보다 늦게 입사한 후임의 연봉이 더 많은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기관 운영으로 이미 한 차례 혼란을 치른 바 있다.

그런데, 전북TP가 이를 해결하는 사

후처리 과정에서 자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담당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특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외부용역에 의존해 내부 보수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TP의 무능과 무책임도 문제지만, 용역을 경영평가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TP의 경영방식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지난 1년간 전북TP는 종합경영진단, 경영실적관리 코칭, 보수체계 개선 등 기관경영 관련 용역 3건을 모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겨 수행했다.

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 연속 도 경영평가를 수행한 기관으로 확인됐는데, 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환심을 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TP의 과도한 외부용역 의존도와 조례 규정 위반 문제를 불거졌다. TP의 일반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2018년 2억원 가량에서 2020년 8억 원을 초과하며 불과 2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용역 의존도가 심각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TP는 2년 동안 48건의 용역을 추진했지만,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는 30건으로 나머지 18건은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전북TP의 제멋대로 식 기관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례 규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다.

“전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TP는 매년 직원채용계획과 예산산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계획은 미제출된 상태고 예산서는 기한을 넘겨 제출됐다.”

김철수 농산경제위원장은 “도내 주력산업이 연이은 가동중단과 공장 폐쇄로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전담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안이하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기관 쇄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구정책 ‘집안 단속부터’

최영일 도의원, “균형발전 위해 다각적 교육인프라 구축 필요”



“전북도 인구는 미비한 교육인프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이 도외로 떠나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증한 도내 인구 감소현상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북도·전북도교육청의 정책 때문”이라면서 집안단속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향해 “도내 교육만큼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이 되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오히려 소외된 지역의 인구감소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소멸 위기 지역 18곳에서 도내 5곳이 포함돼 있고, 이 5곳 모두 도내 동부 산악권에 몰려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11년 인구 3만명 미만 지역 3곳에서 2곳이 더 증가해 동부산악권 지역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영일 의원은 “현 정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않고 교육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의견에 불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동부산악권의 미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지역의 학생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학령기 학생들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내 교육 현장의 전체적인 문제, 교육 현장에서 집안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최근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감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내 교육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할 가용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이 감소해 교육재정도 줄어줄 수 있는 도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공약집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내세운 만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게 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이어나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정한 인구의 유지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지켜야 할 전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증가해 아이러니한 데드크로스 상황”이라면서 “이는 인구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만 재난이 아닌, 도 인구 감소는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커 재난상황과 같다는 표현이다.

최영일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순이동이 1만1,81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내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영일 의원은 “도내에 안정적인고 비전있는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돼야 함에도 오히려, 기업들이 빠져나가거나 폐쇄까지 하는 등 불안한 도내 기업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전북을 판매하는 대표 영업사원은 송하진 지사”라면서 “도를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이자 홍보대사로서 도를 찾아오는 기업들을 더욱 더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기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에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와 고용율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 마련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인구 감소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기존 농어촌교육특구와 혁신교육특구를 통합해 전북교육협력지구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 지역 농어촌 학교와 원도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지사 역시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산업 육성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나기학 도의원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적극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17일 제37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배후 산업 이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항만전문인력 부재 문제, 군산항 항로 기준수심 및 1~3부두 진출입로 문제, 제2준설도 투기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항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 시 항만분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두별 선박 접안능력과 통항로별 운항선박에 맞는 적정수심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3부두 암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제2부두 건설과 관련해 해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명숙 재판 위증’ 첫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장관 “처리 과정 공정하지 못해 결론마저도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 한점 ▲대검이 사건 조사를 맡

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지 않은 점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낸 점 ▲임 연구관이 기소 계획을 밝힌 뒤 대검이 주책임자를 변경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제진실 발견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대검이